국민의당 핵분열에 "지역 정치인 "어느당 갈까" 고민

광주시의원 8명·구의원 13명 무더기 탈당 광주 유일 국민의당 동구청장 결정 못내려 전남도의원 20명 탈당…16명 민평당 입당 박홍률 목포시장・고길호 신안군수 민평당에

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창당으로 옛 국민의당 소속 광주·전남지역 광역·기 초의원, 기초단체장의 탈당이 이어지는 등 지역 정치권도 요동치고 있다.

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고공 지지율 속에 서 6·13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역 정 치권은 더욱 고심에 빠졌다. 당의 색깔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의 특 성상 옛 국민의당을 탈당한 정치인들이 민 평당, 바른미래당, 무소속 등 행선지를 놓 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. 또 새롭게 선보인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의 호남 내 파급력을 예상할 수 없어 민주당도 설 민심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.

13일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 8명과 구의원 13명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"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호남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가치를 저버리고 바른 정당과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했다"며 집 단 탈당했다. 이들은 "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부정하고 평창올림픽을 통한 남북 화해무드마저 폄하 하는 등 정체성이 다른 정치세력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 다"고 탈당 배경을 설명했다.

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모두 9명 으로 이 중 8명이 이날 탈당에 참여했고, 같은 당 소속 광주 구의원은 모두 23명으 로 이 중 13명이 동반 탈당했다.

이들의 탈당이 본격화 하면서 이들의 행 선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. 광주 시의회 경우 국민의당 소속 9명 중 김옥자 (광산3) 의원은 지역구 권은희 국회의원을 따라 미래당에 합류하기로 했고, 다른 시 의원들은 탈당 후 각자도생을 선택했다.

이날 이은방(북구6) 의장을 비롯해 김민 종(광산4), 박춘수(남구3), 유정심(남구2), 조영표(남구1), 이정현(광산1), 문태환(광 산구2), 심철의(서구1) 의원 등이 탈당에

이들의 행선지도 제각각이다. 이들 중 이은방・박춘수・유정심・조영표 의원은 현 재 민평당 광주시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 는 등 민평당에 합류할 예정이며, 김민종ㆍ 심철의·문태환·이정현 의원은 당분간 무 소속 상태에서 추후 정치 상황을 지켜본다 는 입장이다.

현재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4명의 시의 원 중 상당수는 민주당 복당·입당이 여의 치 않은 상황에서 무소속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는 없어 민평당의 옷을 입을 것이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.

옛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 원내대표

인 김민종(광산4) 의원은 28일 "통합 반대 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인들 대다수가 뜻을 같이 하지만 이후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"면서 "지방선거가 코 앞이라서 행선지를 정하지 못한 탈당파 시의원들도 조만간 결정을 내 릴 수 밖에는 없을 것"이라고 관측했다.

광주지역 유일한 국민의당 소속 기초단 체장인 김성환 동구청장의 고심도 깊다.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주선 의원의 바른미 래당 합류에 따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태다. 또 이날 함께 탈당한 광 주지역 기초의원인 김옥수, 남광민, 마광 민, 박용화, 양일옥, 오광록, 유관운, 이관 식, 이동춘, 이병석 임순애, 최무송, 하주 아 구의원들도 조만간 각자의 행선지를 결 정하게 될 전망이다.

전남 정치권도 어수선한 분위기다. 다 만,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 인기 덕에 여당 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다.

전남도의원은 총 57명이다. 이 중 더불 어민주당이 29명, 민주평화당 16명, 국민 의당 5명, 자유한국당과 민중연합당 각각 1명, 무소속 5명이다.

국민의당의 핵분열로 지방정가도 다당제 로 재편됐다. 국민의당 소속 25명 가운데 안철수-유승민 통합에 반발해 20명이 탈당 했다. 이 중 장일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 내대표 등 16명이 민평당에 입당했다.

탈당파 중 권욱 부의장과 한택희·전정 철·서일용·이충식 의원 등 5명은 아직까 지 갈길을 정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. 이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민평 당 간판과 무소속 중 실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임명규 의장과 주연창·조상래·민병흥· 박현호 의원은 아직 국민의당에 남아 있 다. 하지만 설 연휴가 지나면 당적의 변동 이 있을 것으로 감지된다. 민병흥 의원과 조상래 의원은 조만간 국민의당을 탈당하 고 민평당에 합류하겠다고 밝혔다. 임명규 의견을 나눈 뒤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.

바른미래당에 몸을 실은 주승용 국회의 원과 가까운 주연창 의원도 고심 중이다.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도의원 재선이 어 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.

국민의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박홍률 목 포시장과 고길호 신안군수는 일찌감치 민 평당에 합류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



청소년들 격려하는 추미애 대표

더불어민주당 추미애(가운데)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청소년 지원시설 유스스퀘어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격려

민주당,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지역은 어디?

광주 1곳·전남 3곳 대상 ··· 한 곳도 안 할 가능성도 광주 서·남·광산구, 전남은 무안·해남·보성·신안·목포 거론

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 기초단체장(자치구청장·시장·군수) 선거 후보자 추 천에도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혀 광주·전남지역에 어 느 곳이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.

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 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 가 필요한 선거구에 한해 전략공천을 하기로 결정했다.

백혜련 대변인은 "상대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 응 및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,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,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, 심사 및 경 선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

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로 했다.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,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,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기로 했

이에 따라 민주당은 광주에서 1곳, 전남에서 3곳 내에 서 전략공천을 할 수 있게 됐다. 전략공천 선거구는 시도 당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. 물론 광주와 전남에서 반드시 4곳을 전략공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 '이내'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한

전략공천은 선거 때마다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해당 정당의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쳐왔다. 지난 2014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을 전 략공천하면서 강운태 전 광주시장과 이용섭 당시 국회의 원이 탈당하는 등 큰 논란이 일었다.

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도 13일 "자칫 사소한 공천 실수 가 전체 선거판을 흔들 수 있어 호남에서 전략공천은 최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"고 전망했다.

그럼에도, 선거구도가 변하거나 지역구마다 특별한 상 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략공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. 특 히 당한・당규에 있는 청년 및 여성에 대한 공천 우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.

광주의 경우 당 일각에선 서구와 광산구를 우선적으로 거론하고 있다. 특히 광산구는 벌써 여성 전략공천 지역 구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.

후보로 거론되는 한 여성 정치인이 최근 입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겠지만 비대해진 신도심을 중심으로 독 특한 표심이 형성되고 있어 청년 여성을 우대하는 전 략공천을 완전히 무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

그동안 여성 전략공천이 자주 시도됐던 서구도 전략 공천 대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. 또 남구의 경우도 광산구와 함께 현역 구청장이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장

을 던진 상태여서 전략공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관측 이다.

전남의 경우 우선 현역 시장·군수가 부정부패 혐의 등 으로 자리를 비운 지역과 현역 시장군수가 다른 당의 소 속일 경우가 검토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전략공천 을 하면 가장 큰 반발을 현역 단체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논란의 정도를 수그러뜨릴 수 있기 때문

이 때문에 군수 권한대행체제인 무안·해남·보성군과 단체장이 경쟁 당 소속인 신안군, 목포시 등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.

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 후유증을 오랫동안 겪었 거나 잘못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역의 경우, 혼탁 경선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예 방 차원에서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공천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. 물론 과열로 경선이 무 산될 상황이 돼도 자연스럽게 전략공천이 시도된다.

하지만, 전력공천을 할만한 마땅한 인재발굴이 우선이 라는 지적이 많다. 누가 봐도 지역을 한 차원 발전시킬만 한 인재라면 명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 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.

한편,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우 호남에서는 경 쟁 정당의 후보를 보면서 여러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이 뤄질 가능성이 크다. 특히 바른미래당의 경우 후보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상당수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불가 피할 전망이다.

/ 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



